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1992. 12.

余仁坤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변혁을 추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구소련과는 구별되는 ‘신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신외교정책’은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질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통일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구소련/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이 한국의 안보와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본연구를 추진하였다.

본연구는 구소련/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에서의 변화와 지속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전망하였다.

본연구가 동북아 국제환경 및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와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2. 12.

민족통일연구원

국 제 연 구 실

要 約

第I章 序 論

19세기 중반 이래로 러시아인들은 한반도를 극동지역 안보의 요충지로 간주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과는 2차례(1904~5년 러·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한국전쟁을 사주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소련의 대한반도 및 동북아정책에 유의하여 왔다.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한 바 있는 한국은 미, 중, 일과 함께 한국의 통일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구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연방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에서의 변화와 지속 측면을 분석하고 향후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추진방향을 전망함으로써 한국이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대러시아연방 외교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第II章 舊蘇聯의 對韓半島政策

1. 冷戰時代 蘇聯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구소련은 1945~1985년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전세계를 공산화하고 군사력을 기초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는 바, 이 시기의 대한반도정책 전개과정은 한반도 공산화 추진기와 현상유지기로 구분될 수 있다.

가. 韓半島 共產化 推進期(1945~1953)

스탈린은 제2차세계대전 종료직전 대일전에 참여하여 극동으로의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일본 및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구하였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스탈린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국전쟁을 사주하여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나. 韓半島 現狀維持期(1953~1985)

소련은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한반도분단이 고착되자 유럽중심주의 외교와 자국에 불리한 동북아 세력균형 때문에 미국과의 정면대립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공산화정책보다는 한반도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하였는 바, 이 시기 소련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전개과정은 국제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

(1) 1953~1960年代初의 冷戰時期

소련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본을 중립화하는 것이었으며, 소련은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대응하고 중·북간의 관계

긴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대북한 일변도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이 시기 소련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이고 부정적이었다.

(2) 1960年代初~1975年の 데탕트時期

중·소분쟁의 악화로 중국이 점진적으로 대미 접근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북아에서 모스크바-워싱턴-북경간의 세력균형 관계는 소련측에 불리하게 되었다. 소련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극동군사력을 증강하고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제안하는 한편, 북한의 대중편향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소련은 신흥개발도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1970년대 전반기부터 모색하였으나, 한·소접근으로 인한 북한의 대중편향을 우려하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에 한정되는 소극적인 대한국정책을 추진하였다.

(3) 1975~1985年の 新冷戰時期

제3세계에 대한 팽창정책을 추진하던 소련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일·중 3각체제를 견제하기 위하여 극동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일·중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소외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을 아·태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북한 군사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또한 소련은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한국과의 경협관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적교

류와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소관계는 1983년의 KAL기 사건으로 냉각되었다.

2. 고르바초프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積極的인 對韓半島 等距離外交(1985~1991)

「신사고」외교를 표방한 고르바초프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을 완화하고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중관계를 정상화하고 태평양에서의 군축과 신뢰구축 등 대일본 평화공세를 전개하여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86년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한국민의 민족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19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대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적극화하였다. 소련은 미국의 극동군사력과 중국의 대한국 접근을 견제하고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동시에 소련은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기존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대한국정책을 재평가하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유치, 동북아에서 미국 견제를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지지 등을 통하여 대한국관계를 강화하였다.

第三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1. 러시아聯邦의 ‘新外交政策’과 韓半島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민주주의체제 확립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체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의 창출을 외교정책 목표로 삼고 접경국가들과의 선린관계 구축,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서방민주·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신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북아에서는 지역안정 및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는 이와 같은 ‘신외교정책’ 목표와 동북아정책 기조의 틀내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우선의 대남북한 경제관계 활성화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2. 對韓半島政策 決定要因

상기와 같은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내적 요인은 국내개혁이며, 대외적 요인은 미·러관계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이다.

러시아연방의 현 정치상황은 엘친 대통령의 급진개혁정책을 둘러싼 보·혁간 갈등심화로 불안정하며, 현 경제상황은 급진개

혁명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혼돈상태에 있다. 엘친 대통령은 보·혁간의 갈등심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혁속도를 조절할 것이나, 러시아연방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당분간 정치불안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미·러관계는 동반자관계 선언과 군사력 감축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은 전략핵무기체제의 현대화를 통하여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내 경제침체와 러시아연방의 정세불안정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경제원조를 자제하고 있다. 특히 서방제국의 경제지원은 러시아연방의 정치·경제개혁과 연계되어 있어 러시아 국내정세의 안정유지와 개혁정책의 지속이 상호협력강화의 관건이 되고 있는 바, 러시아연방은 대미·서방 관계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역내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도 군사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현재 동북아지역이 아직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과도기적인 불안정국면에 있다고 평가하고,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견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관계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협력사찰을 지연시키고 있고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재개결정과 관련하여

여 한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한·중 수교, 옐친 대통령의 방한 등 주변 강국들의 한반도정책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구축, 나아가서 동북아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자국의 역할증대를 추구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러시아연방은 국내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경제난 해결과 주변정세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한국과의 경험관계를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본의 경험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나아가서 러시아연방은 대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모색하고 남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3. 러聯邦의 對南北韓關係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대남북한관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한국관계는 한국정부가 구 소련에 제공했던 차관의 상환보증과 이자지불 지연문제로 경제협력면에서 일시적으로 교착상태를 보였으나, 1992년 11월 18~20일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존의 국교정상화 단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러시아연방과 북한간의 정치관계는 한·소 국교정상화와 소연방의 붕괴 이후 급격히 냉각되어 현재 매우 불확실한 단계에 있으며 경제관계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즉, 러시아연방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1961년 소·북간에 체결된 동맹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을 좀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Ⅳ章 統一問題에 대한 러시아聯邦의 立場

1. 核 및 軍縮에 대한 立場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 안정화를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군비통제 및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핵개발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국제기구와 함께 확인하려 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군사대치 해소, 무기감축, 신뢰구축을 위하여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 및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경험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의들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러, 미, 일, 중, 남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안보체제

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으로부터 미국을 축출하려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2. 南北間 交流·協力에 대한 立場

러시아연방은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한반도문제의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남북한간의 상호불신이 남북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지지입장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연방의 입장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통하여 자국의 국내개혁에 장애가 될 지도 모르는 대외적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3. 統一韓國에 대한 立場

러시아연방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근본적인 변혁이나 붕괴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간에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통일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러시아연방의 일부에서는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나, 한반도의 통일방식에 대한 러시아연방내 견해

들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연방은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가 된다면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반도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통일 문제가 국제화되는 추세를 보이면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다국간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第V章 舊蘇聯과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評價： 變化와 持續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변화된 측면은 한반도 공산화정책, 한국에 대한 인식, 대남북한 경제관계,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이며, 지속되고 있는 측면은 한반도의 안정 모색과 북한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 變化側面

한반도 공산화정책과 관련, 구소련은 「코민테른」(Comintern)에 의한 한국공산주의운동 지원, 김일성을 대리인으로 하는 혁명수출, 통일전선전술과 무력남침 등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를 기도한 바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동서진영간의 데탕트 이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서는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대외정책상의 실질적인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다.

소련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이고 부정적이었으나 한국이 신흥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러시아연방도 현재 한국에 대하여 선린우호관계와 동반자관계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소련의 대남북한 경제관계와 관련, 1990년도와 비교할 때 1991년도의 한·소간 무역량은 35% 증가하였으나 소·북간 무역량은 40% 감소하였다. 현재 한·러간 경제관계는 엘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반면, 러·북간 경제관계는 악화된 상태에 있다.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과거 일방적인 대북 지지로부터 한국의 통일방안 지지로 선회하였다. 구소련은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였으나,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적정수준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2. 持續側面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러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전, 제2차세계대전 종료시 및 중·소분쟁시 등 동북

아지역에서 역내세력균형이 불안정하거나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안정을 모색해 왔고, 국내개혁정책을 추진중인 러시아연방도 동북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 유지를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한편 구소련은 북한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러시아연방도 군사면에서 대북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소련은 1945년부터 1991년 말 소연방이 붕괴될 때까지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북한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연방도 동북아지역에서 자국 안보전략체계의 약화를 우려하여 1961년 소·북간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하기 보다는 수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第VI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1. 러聯邦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가. 政治·軍事分野

국내개혁을 위하여 유리한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분단의 현상유지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주도의 한

반도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안정,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 견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하여 1961년 소·북간에 체결된 군사동맹조약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 제1조의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대북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측되며, 남북한간의 군축과 군비통제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經濟分野

현재 한국의 경제협력 및 투자가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및 소비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한국 경제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연방과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현재의 하향 추세가 계속 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양국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경제분야에서 과거 대북관계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한국관계를 더욱 중요시 할 것이다.

다. 南北韓問題 關聯分野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핵개발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국제기구와 계속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현재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안정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4」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연방은 이미 사회주의체제를 청산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도의 흡수통일 등으로 한반도통일이 가시화되더라도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통일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문제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서 미군의 한국주둔을 계속 용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 韓國의 對러聯邦 外交政策 推進方向

가. 政治·軍事分野

한국정부는 러시아연방의 일방적인 대북한 지지 가능성을 견제하고 러시아연방이 남북한에 균형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안보문제와 경협문제를 연계시켜 북한에 대한 첨단군사무기 판매자제와 핵원료의 밀반출 방지를 러시아연방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한·러간의 군사협력문제는 한국의 대미·일관계에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정세 변화를 고려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러시아연방이 제안하고 있는 다자간안보체제 형성에 관심을 보일 필요는 있다.

나. 經濟分野

한국은 러시아연방과의 경협관계를 안보와 경제실익 및 대북 관계와 연계시키는 전략적 사고하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연방 개혁의 성공여부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경협확대를 통해 러시아연방의 경제 개혁과 정치안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연방의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자본보다는 산업과 농업 기술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사전조사 이후에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교환할 수 있는 「러시아 경제정보센터」 등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연방의 자원과 경제잠재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되 미·일과의 다자간 공동참여 방식이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 南北韓問題 關聯分野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러시아연방과 함께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한·러 경협관계를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핵압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러시아연방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반도통일 문제가 국제적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러시아연방과의 전반적인 관계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目 次

序 文

要 約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舊蘇聯의 對韓半島政策	3
1. 冷戰時代 蘇聯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3
가. 韓半島 共產化 推進期(1945~1953)	3
나. 韓半島 現狀維持期(1953~1985)	7
2. 고르바초프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積極的인 對韓半島 等距離外交(1985~1991)	7
第Ⅲ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25
1. 러시아聯邦의 ‘新外交政策’과 韓半島	25
2. 對韓半島政策 決定要因	28
가. 國內改革	28
나. 美·러關係	33
다. 東北亞 情勢	36
라. 韓半島 情勢	39

3. 러聯邦의 對南北韓關係	43
가. 對韓國關係 擴大	43
나. 對北韓關係 調整	47
第IV章 統一問題에 대한 러시아聯邦의 立場	51
1. 核 및 軍縮에 대한 立場	51
2. 南北間 交流·協力에 대한 立場	54
3. 統一韓國에 대한 立場	55
第V章 舊蘇聯과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評價: 變化와 持續	58
1. 變化側面	58
가. 韓半島 共產化政策 拋棄	58
나. 韓國에 대한 認識의 變化	60
다. 韓國優先의 對南北韓 經濟外交	60
라. 南北韓의 統一政策에 대한 支持立場 變化	61
2. 持續側面	62
가. 韓半島의 安定摸索	62
나. 北韓의 軍事戰略의 重要性 堅持	63
第VI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65

1. 러시아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65
가. 政治·軍事分野	66
나. 經濟分野	67
다. 南北韓問題 關聯分野	68
2. 韓國의 對러聯邦 外交政策 推進方向	69
가. 政治·軍事分野	70
나. 經濟分野	71
다. 南北韓問題 關聯分野	72
參考文獻	74
附錄 1 Korea-Russia Basic Treaty	81
附錄 2 韓·러시아 基本條約	88

第I章 序 論

러시아인들은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를 극동지역 안보의 요충지로 간주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변 강국들과 경쟁을 벌여왔다. 제정러시아는 전통적인 동진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로의 팽창정책을 추진하던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충돌로 1904~5년에 러·일전쟁을 수행한 바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구소련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한국전쟁을 사주하였는 바, 이 전쟁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의 실패는 동서진영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대립과 반목을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상호불신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한 바 있는 한국은 국가안보의 확보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시하고 있고 미·일·중과 함께 한국의 통일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구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연방과의 관계에 유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에서의 변화와 지속 측면을 분석하고 향후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추진방향을 전망함으로써 한국이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평화통

2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대러시아연방 외교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第Ⅱ章 舊蘇聯의 對韓半島政策

1. 冷戰時代 蘇聯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구소련은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부터 1985년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이 집권할 때까지 대외정책면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전세계를 공산화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기초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련은 한국전쟁시까지 동서진영간의 첨예화된 냉전기에 대미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한반도의 공산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한반도분단이 고착되자 1953~1985년 시기에는 유럽중심주의 외교와 자국에 불리한 동북아 세력균형 때문에 미국과의 정면대립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공산화정책보다는 한반도 현상유지(status quo)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가. 韓半島 共產化 推進期(1945~1953)

제2차세계대전 중 전후세계질서에 대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체제에 기반을 둔 ‘하나의 세계’(one world) 건설이었다면, 스탈린 소련 공산당서기장의 구상은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방지하고 국제상황이 유리한 곳에서는 공산혁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었다.¹⁾

1) Egbert Jahn, "Sowjetische Weltpolitik," in Manfred Knapp and Gert Krell (eds.), *Ein-*

스탈린은 이러한 자신의 구상에 따라 제2차세계대전 종료직 전 대일전에 참여하여 극동으로의 팽창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희생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및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공산혁명의 수출과 모택동에 의한 중국의 공산화로 스탈린은 사회주의체제를 확대하고 극동지역의 안보를 공고히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중국의 경우, 스탈린은 국공내전에서 양측의 세력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중전략을 가지고 대중정책을 수행하였다. 스탈린은 극동에서의 자국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외교면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국민당 정부를 중국의 중앙정부로 승인하고 1945년 8월 14일 장개석 정부와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중국 공산혁명을 위해서 이념과 군사적인 면에서는 만주에 있던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하고 국공합작에 의한 중국공산화를 주장하였다. 모택동의 무력에 의한 공산화전략에 따라 1949년 10월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소련은 중국과 정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1950년 2월 14일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그 동맹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²⁾ 일본의 경우, 스탈린은 일본

führung in die Internationale Politik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90), pp. 121~22
2) 「중·소간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 참조.

에 대한 군사점령에 참여하여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의 통일전선을 통하여 일본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전후 일본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미국과의 이해대립으로 대일 군사점령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일본에서의 공산혁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스탈린과 일본공산당의 정책은 사회당 우파의 반대와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 및 1951년 9월 일본의 주권회복 등으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

소련은 1945~53년 시기에 한반도에서 통일전선전술과 무력에 의한 공산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스탈린은 대일전 참전 직후 전후의 일본점령에 참여할 목적과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트루만 미대통령이 1945년 8월 15일 「일반명령 1호」에서 제안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한반도 분할점령에 반대하지 않았다. 북한지역을 점령하게 된 소련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하여 대일전 종료 직후 김일성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선발하여 북한점령지역에 파견하고, 동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1서기로 선출하여 「민주기지」론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친소공산정부의 창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소군정 당국은 1946년 초부터 자신의 점령지역에서 「북조선노동당」 창설과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등 일련의 체제개혁을 통하여 친소 공산정권 창출을 기도함으로써 소련 극동지역에 자국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를 구축하는 한편,³⁾ 일본

3)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 3. 20~5. 8)에서 소련측 대표 스티코프 대장은 소련의 극동안보를 고려하여 “소련은 진실로 민주적이며 독립적이

에서의 경우처럼 통일전선전술을 통하여 전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수행하였다.

1948년 8월과 9월 남북한정부가 수립되고 무력에 의한 중국 공산화가 기정사실화 되어가자 스탈린은 전 한반도에 친소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1950년 1월 12일 「에치슨 선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김일성의 무력남침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국전쟁을 위한 군수물자를 지원하였다. 소련은 한국전쟁 당시 동서진영간의 냉전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대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 7만명의 공군을 중국 공군으로 위장시켜 파견하였다.⁴⁾ 북한에 혁명을 수출하여 소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설한 소련이 남한지역까지 공산화하려고 했던 이와같은 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에 기초된 것으로 중국공산당정부 견제, 아시아대륙에 대한 미국의 관여 방지, 일본에 대한 군사·경제·외교·심리적인 영향력 행사, 부동항 획득 및 소련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 확보 등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⁵⁾

고 소련에 우호적인 그래서 장차 소련에 대한 공격기지가 되지 않는 한국에 중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6, vol. VIII (Washington D.C.), p. 653.

4) 이는 당시 소련공군대장었던 게오르기 로보프의 증언내용임. 「동아일보」, 1992. 7. 6.
5) Basil Dmytryshyn, “Soviet Perceptions of South Korea,” in Jae Kyu Park and Joseph M. Ha (eds.),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Seoul: The Institute fo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3), p. 4 참조.

나. 韓半島 現狀維持期(1953~1985)

소련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자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집권할 때까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분단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친북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전개과정은 국제체제의 변화와 연계시켜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냉전시기의 정책,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데탕트시기의 정책 및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신냉전시기의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韓國戰爭以後 冷戰時期的 政策: 對北韓 一邊倒外交

동서진영간의 냉전이 첨예화되자 미국은 강력한 대공산권 봉쇄정책을 수행한 반면, 소련은 자국안보의 확보, 국제적인 영향력의 강화 및 확대, 타국에서 공산세력의 보호 및 발전, 미국 영향력의 제한이나 제거를 위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 미·소간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류파멸의 가능성이 고조되자 흐루시초프 공산당서기장은 1956년의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상이한 체제간의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을 정립하였다.

흐루시초프시대의 동북아정책 목표는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본을 중립화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은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1954년 4월 인도차이나에 관한 제네바회의에서 아시아

집단안보 구상을 발표하고⁶⁾ 사회주의권의 유대강화와 미국 견제를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대중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1956년 10월 일본과의 전쟁상태를 종료시키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소련은 일본을 미국의 동맹체제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중립화와 비핵평화지대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소관계는 1950년대 말부터 이데올로기 대립과 사회주의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악화되었고 1950년대 말까지 소련의 대일관계는 미·일간의 안보조약 연장교섭과 일·소간의 북방영토문제로 대립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중·소분쟁 및 일본과의 대립상태에 직면하게된 소련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일동맹체제와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냉전시기에 소련은 대북한 일변도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소련은 미국의 대소봉쇄정책과 중·북한간의 관계 긴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북한의 전후재건과 산업화 및 군사력 증강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치면에서 당시 모스크바와 평양간의 관계는 한국전쟁중 '의용군' 파견에 의한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 전쟁중 소련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김일성의 대소 불신, 소련외교의 유럽중심주의, 소련의 제한된 경제원조에 대한 김일성의 불만족 등으로

6) 소련의 이러한 아시아집단안보 구상은 「미·일 안보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필리핀 상호방위협정」,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의 존재와 미국의 동남아시아 집단안전보장기구(SEATO) 창설 움직임 등에 대응하여 표방된 것이었다.

원만하지 못했다. 따라서 소련은 김일성의 권력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1950년대 후반에 북한의 국내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즉 소련은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비밀연설을 한 이후 북한의 친소련파 세력들로 하여금 소련의 개인숭배 비판을 지지케함으로써 김일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려 하였다.⁷⁾ 이를 계기로 소련의 대북한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소련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것이었다. 소련은 한국을 결코 진정한 독립국가로 간주하지 않았고 “한국은 곧 소멸될 미제국주의의 전초기지”⁸⁾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국적인 ‘통일민주전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정책과 「대량보복」 군사전략에 직면하게 된 소련은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관계 때문에 선전적 차원에서만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지지하였을 뿐 한국전쟁 이전과 같이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극동 지역의 안보를 중시하고 있던 소련은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있어 북한과 소련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며 한

7) Ralph N. Clough,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in Donald S.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p. 178.

8) 한국에 대한 이러한 소련측의 인식은 소련에서 발간된 다수의 책에 나타나 있다. Basil Dmytryshyn, “Soviet Perceptions of South Korea,” p. 8 주 7 참조.

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주요한 장애요소라고 주장하였다.⁹⁾ 곧 소련은 자국의 안보유지 차원에서 북한을 미국전제를 위한 전략 기지 내지는 완충지대로 이용하였다.

(2) 東西陣營間 데탕트時期의 政策: 對北韓關係의 弱化와 消極的인 對韓國 接近

핵무기에 의한 인류파멸의 위험속에서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미·소간의 타협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자 동서간의 냉전체제는 데탕트체제로 전환되었고, 소련과 미국은 전쟁방지와 국제위기관리 및 군비통제를 위한 긴장완화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과의 핵균형을 달성하여 초강국이된 소련은 이러한 긴장완화정책을 1975년까지 추진하였으나 공산혁명 수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미·소간의 데탕트가 이루어진 시기에 동북아지역에서는 중·소관계가 1969년 3월 우수리에서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악화되었다. 1970년대 초에 동서진영간의 데탕트가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점진적으로 대미 접근정책을 추진하자 동북아에서 모스크바-워싱턴-북경간의 세력균형관계는 소련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었다. 브레즈네프 공산당서기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소국경지대와 몽고 및 태평양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1972년 3월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대일 정치관계도 변화시켜 일본을

9) Ibid., pp. 14 & 31.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였다. 소련은 이러한 목적에서 1973년 10월 다나카 일본수상의 방소를 계기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북방영토문제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동서진영간의 대탕트 시기에 한반도문제는 소련의 유럽중심 주의정책과 중·소분쟁 및 북한과의 갈등관계 등으로 소련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 소련은 중국과의 분쟁 때문에 북한의 대중편향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과는 한·소접근으로 인한 북한의 대중편향을 우려하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소련의 대북한관계는 중·소 분쟁기에 김일성의 대소 및 대중 이중외교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소원한 상태에 있었다. 동서진영간의 냉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은 북한과 1961년 7월 6일 동맹조약인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¹⁰⁾ 그러나 1962년의 쿠바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자 북한은 중국에 동조하여 흐루시초프의 대미 굴욕외교를 비난하였으며 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대북한 원조를 삭감하였다. 이와 같

10) 「조·소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는 양국중 일국이 제3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 타국은 즉각적으로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문은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m Soyuza s narodnoy Kore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pp. 196~98.

이 소련과 북한간에는 외교정책과 이념면에서 상이한 입장이 견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긴장이 상호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1964년 흐루시초프의 실각,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수상의 평양방문,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 악화 때문에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다시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모스크바와 평양간의 관계는 다시 새로운 긴장을 맞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첫째, 김일성의 독자적인 외교정책과 1973년 이래 중국주도의 비동맹 가입 노력, 둘째, 김일성의 개인숭배정책에 대한 소련의 비난과 북한의 친중 정책에 대한 소련의 압력, 셋째, 김일성의 호전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소련의 반감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은 북한의 호전적인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는 경우 미·소가 동맹조약으로 자동개입하도록 되어 있어 미·소관계의 악화와 데탕트의 종료, 중국의 개입과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 등 소련의 안보이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¹¹⁾ 따라서 소련은 이 시기에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1960년대 한국에 대한 소련의 태도는 1950년대와 같이 여전히 부정적 이었다.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수상의 평양 방문시 발표된 공동성명¹²⁾에서 「한·일 기본관계조약」은 미국이 주도하

11) Donald S. Zagoria, "The Kremlin Looks Bad in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I, no. 1 (Spring/Summer 1983), pp. 123~24.

12)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m Soyuza s narodnoy Koreey 1945~1980*, pp. 220~26.

는 동북아시아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출발점이라고 비난되었다. 김학준 대통령 사회보좌역에 의하면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소련의 비난도 강도가 높았으며, 소련은 「아시아·태평양양이사회」(ASPAC)가 창설되었을 때 이를 미국의 후원을 받아 반공적인 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¹³⁾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브란트 동방정책의 결실과 미·소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의 조인 등 동서진영간의 긴장완화 성숙,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의무를 축소시키려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 선언, 1971년 7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 계획 발표, 한국정부의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 표명, 남북한간의 접촉개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은 소련의 대한국정책을 변화시켰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련은 한국의 예술인, 경제인, 기자, 스포츠선수단 등에게 소련입국 비자를 발급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남북분단이후 최초로 한국에 공개적인 접근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한·소접근으로 인한 북한의 대중편향을 우려하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하는 한국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¹⁴⁾ 소극적인 대한국정책을 추진하였다.

13) 金學俊, “韓國休戰 이후 現在까지의 大韓民國의 北方政策,” 「韓國北方關係의 政治外交史의 再照明」,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 第6輯 (1989), p. 244.

14) 위의 논문, p. 250.

(3) 東西陣營間 新冷戰期の 政策: 對北韓 軍事協力 強化

1960년대 초 이후의 동서진영간 긴장완화는 평화공존에 대한 미·소간의 개념차이¹⁵⁾와 1975년 베트남 공산화로 인한 미군의 인도차이나 철수 이후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팽창정책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79년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은 미국의 반소 및 반공정책을 유발시켜 동서진영은 신냉전기를 맞게 되었다. 동서진영간의 신냉전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 소련의 대중관계는 모택동 사후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1970년대 말부터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나 대일관계는 북방영토문제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소련은 1978년 8월 12일 「일·중간 평화 및 우호조약」의 ‘반패권주의’조항이 자국에 향해지자 미·일·중 삼각협력체제를 견제하고 동북아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견지를 위하여 전략요충지인 북방영토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중국은 소련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서방과의 협력증대 필요성으로 1979년 4월에 1950년 체결된 소련과의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의 연장을 거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중·소 양국은 동북아 주변환경의 안정이 양국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인식하에

15) 평화공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동서진영간의 대결을 긴장완화로 전환시켜 국제체제의 파괴위험을 축소하고 평화적 경쟁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었으며, 소련의 입장은 국가간의 대립과 대결이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을 통해 해결되어서는 안되지만 계급투쟁의 법칙이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다.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정치의 보수화로 대미관계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독립자주의교노선을 표방하고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교섭 개시, 경제관계 회복, 국경무역 재개 등 양국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소련은 대일관계에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북방영토에 대한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중국 견제를 위하여 선린우호협력 등 일본과의 정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북방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은 일본이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양국간의 국제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¹⁶⁾ 북방영토문제를 기타 문제와 분리시키려는 소련과 정경불가분의 입장을 견지하는 일본의 이해불일치로 소련의 대일관계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동서진영간의 신냉전시기에 소련은 미국의 대소강경정책에 대응하여 북한의 전략적·지정학적 위치를 중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일·중간 평화 및 우호조약」 체결과 미·중관계 정상화로 동북아지역에서 미·일·중 3각협력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소련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북한도 중국의 개방정책에 불안을 느끼고 카터 미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동결 결정에 크게 실망하여 대소관계

16) A.A. Gromyko and B.N. Ponomarev, *Soviet Foreign Policy 1917~1980* in two volumes, vol. 1945~1980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p. 430.

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즉 소련과 북한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84년 5월 18년만에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정치, 경제, 군사원조를 획득한 반면, 소련은 북한에 (1) 소련 군사기지내에서 북한군의 재교육, (2) 소련 군사고문단의 북한파견, (3) 청진, 원산 양항의 군사적 이용, (4) 전략무기체제의 통일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항만 동의하고 (3)항은 나진항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다른 사항들은 거절했다고 알려지고 있다.¹⁷⁾ 군사분야에서 소·북한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1984년 11월 카피차 아시아담당 부외상의 북한 방문시 「조·소국경통과에 관한 조약」 체결과 MIG-23, T-23 탱크, 신형헬기의 제공문제, 원산 및 청진항 사용문제, 공동군사훈련 실시문제 등의 논의에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대북한정책은 첫째, 소련의 태평양함대 증강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견제, 둘째, 베트남 캄란기지의 보급로로서 북한의 중요성 증대, 셋째, 중국해군의 견제, 넷째, 미·일 방위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동해의 중요성 증대, 다섯째, 미·중간 군사교류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¹⁸⁾ 김일성의 방소 이후 소련의 대북한 관계는 정치와 군사면에서 현저히 긴밀하게 되었다.

17) 다케사다 히데시, “最近의 蘇·北韓 接近의 背景 - 北韓의 軍事戰略을 중심으로 -,”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研究論叢 第6輯 (1987), pp. 278~79.

18) 위의 논문, p. 277.

소련은 이 시기에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소련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던 한·소간의 인적접촉은 계속되었다. 특히 1978년 KAL기의 무르만스크 불시착시 소련정부는 호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했으며 국제행사에 한국의 각료, 기자, 스포츠 선수단, 학자들의 소련입국을 계속 허용하였다. 또한 한·소 양국은 1970년대 말 이래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 형태로 교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미·일·중 3각 협력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점차 긴밀해지자 비정치적인 면에서 접근되고 있던 한·소관계는 1978년 이후 다시 소원해졌다. 이는 미·일·중 3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북·소관계의 긴밀화 이외에도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의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려던 한국의 북방정책이 소련으로부터 경계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¹⁹⁾ 1983년 9월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으로 한·소관계 개선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2. 고르바초프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積極的인 對韓半島 等距離外交(1985~1991)

소련사회의 새로운 개혁(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추진하던 고르바초프는 미·소간의 과도한 군비경쟁과 제3세계에 대한 과도

19) 金學俊, “韓國休戰 이후 現在까지의 大韓民國의 北方政策,” pp. 251~52.

한 정치·군사적 지원 및 개입 등 이념대립과 군사적 팽창의 지속보다는 대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신사고」 외교를 표방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신사고」 외교를 통하여 유리한 대외적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첫째, 세계 초강국 지위유지를 위한 군사비부담을 축소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둘째,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하여 서방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재정과 기술 협조를 유도하며, 셋째,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을 통해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려고 하였다.²⁰⁾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은 군사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제악화와 이에 따른 체제위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이전까지는 5% 이상을 유지하여 왔으나 1975년 이후부터는 5% 이하로 계속 하락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가 소련사회의 전반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표1> 소련의 연평균 경제성장율(1951~1991년)

연도	1951	'55	'60	'65	'70	'75	'80	'85	'86	'87	'88	'89	'90	'91
%	11.4	9.2	6.5	7.8	5.7	4.3	3.6	2.3	1.6	4.4	2.4	-4.0	-10	

출처: Stephen White, *Gorbachev and aft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100 & 117. 1991년도는 1~3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는 미국과의 1987년 중거리핵전

20) Bernhard Günter, et al, *Der Sieg der Perestroika* (Bergisch Gladbach: Gustav Lübbe Verlag, 1991), pp. 133~34.

력(INF) 폐기협정 조인, 1989년 12월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 합의, 1990년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파리 정상 회담에서 탈냉전시대의 공식 선언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체제개혁을 통하여 스탈린식 통치체제를 청산하고 레닌주의에 입각한 「인도적 사회주의」를 구현하려던 그의 계획은 경직된 관료제, 공산당과 군부의 저항 및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 발트 3국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 등으로 실패하여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1991년 12월 붕괴되었다.

이 시기에 아·태 및 동북아지역에서 고르바초프는 레이건 미 행정부의 대소 군사강경노선을 후퇴시키기 위하여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통하여 평화공세를 취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 연설에서 아·태지역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회담을 주장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태평양 경제협력’에 소련의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히고 연해주 개발을 중심으로한 시베리아와 태평양경제권의 연계를 강조했다. 1982년부터 시작되었던 중·소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의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급진전 되었다. 양국간의 국경문제 협의 급진전, 「3대 장애」 문제²¹⁾의 해소,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와 동소평의 북경 정상회담 등으로 1950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중·소대립은 종결되고, 양국

21) 중·소간의 「3대 장애」문제는 중·소국경과 중·몽국경의 소련군문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략에 대한 소련군의 원조문제 및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무력침공문제이었다.

관계는 정상화 되었다. 중·소 양국은 종전과 같은 동맹관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선린협력관계를 갖게 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태평양에서의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에 관하여 일본과 협의하고 경제관계 확대를 통하여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소련이 제안한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상적국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의 지역협력을 계속 강조하였다.²²⁾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과 1988년 9월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 일본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나 일·소간의 경제관계를 가로막은 최대 장벽은 북방영토문제이었다.²³⁾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일본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련은 대일 정치 및 경제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고르바초프는 한반도분단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대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84년 5월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한 이후, 특히 고르바초프 시대에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1990년 9월 한·소국교 정상화때까지 현저하게 발전되어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었다. 양국간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한반도에 핵무기자유지대 창설에 관한 북

22) Rajan Menon, "Gorbachev's Japan Policy," *Survival*, vol. XXXIII, no. 2 (March/April 1991), p. 159.

23) Mark Kramer, "Soviet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urrent History* (October 1991), p. 321.

한제안의 실현을 촉구하였다.²⁴⁾ 1986년 10월에 김일성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으며, 소련은 군사면에서 MIG-23 전투기, T-72형 전차, 첨단장비의 유도미사일, 대형 헬리콥터 등의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댓가로 북한영공의 군사적 이용권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대북한정책 목표는 1986년 1월 세 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방북시 발표된 공동성명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동 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제국'의 군사적 우위달성 노력, 극동에서 미국의 군비증강, 일본의 군국주의적 경향증대, 한국의 핵기지화, 미·일·한국간 'NATO형의 신군사정치동맹 창설의 시도'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공동성명은 또한 고려연방공화국의 창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남북한에 의한 불가침선언, 서울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 등의 북한제안을 지지하고 4강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 승인이나 유엔 동시가입 또는 분리가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²⁵⁾ 소련이 이와같이 적극적인 대북한정책을 수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이었다. 첫째, 소련은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 극동군사력 강화와 한·미, 미·일의 전략적 협력강화가 자국의 극동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둘째, 중국이 정치, 경제면에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대

24)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APN-Verlag, 1986), p. 42.

25) 우아 후미오, "고르바초프時代의 蘇聯의 韓半島政策,"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pp. 213~14.

북한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소련은 북한과의 군사협력력을 강화하여 극동에서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확대하려 하였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대한국정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과 탈냉전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려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맞물려 추진된 결과 한·소관계가 급진전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위협스런 긴장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전한국민의 민족문제 해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²⁶⁾고 시사하고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²⁷⁾ 한·소간의 정치관계는 1988년 가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의 대한국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급속히 발전되었다. 당시 소련과학아카데미의 주임으로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K. 보가투로프 박사에 의하면 “서울올림픽에 참가했던 소련언론인들과 정부인사들은 귀국한 뒤 대한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세에 찬성하는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소련의 입장이 좀더 현실적이고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다.”²⁸⁾ 이러한 배경으로 한·소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직교역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 9월 30일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었다.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통해 과거 40여년간 유지되었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양자관계에서 뿐만 아

26)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p. 42.

27) *Sowjetunion Heute*, nr. 10, Okt. 1988, Dokumente, p. V.

28) 「조선일보」, 1990. 12. 14.

나라 남북한관계 및 동북아정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고르바초프는 동년 12월 14일 한·소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했던 소련의 입장이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었다. 한·소 양국정부는 같은 날 이 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무역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4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1월 한국정부는 소련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총 30억달러의 경협자금을 소련에 제공기로 하였으며, 소련은 동년 4월 20일 한·소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1991년 내에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을 위해 유엔안보리에서의 지지를 약속하였다.²⁹⁾ 고르바초프는 당시 「한·소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을 제의하여 양국관계를 한·미관계의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바 있었다.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한국정책은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만을 허용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켜 미국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련의 역할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소련은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과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려 하였다. 제주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소 양국은 과학과 기술협력을 위한 48개 과제의 추진

29)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하였다.

방안을 협의하는 등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켰으나 양국관계는 소련의 붕괴로 단절되었고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이 그 정책을 이어 받게 되었다.

第三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1. 러聯邦의 '新外交政策'과 韓半島

러시아연방은 1991년 12월 21일 구소련의 11개 공화국에 의한 「독립국가연합」의 성립과 더불어 구소련을 법적으로 계승하게 되었다. 소연방이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청산한 러시아연방은 현재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를 위하여 자국에 유리한 주변환경의 창출을 대외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정책 목표가 첫째, 구소련 공화국들을 비롯한 접경국가들과의 선린관계 구축, 둘째, 미국 서구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셋째, 세계강국으로서 서방민주·자본주의권으로의 편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³⁰⁾ 위와 같은 러시아연방의 신외교정책 목표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기조와 어느정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이 이데올로기보다는 지정학적 이해와 경제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자본주의체제와의 체제경쟁을 포기하고 서방민주·자본주의사회로 완전히 편입하려고 한다는 점 등에서 구소련의 외교목표와 구별된다고 할 수

30) Andrey Kozyrev, "Transformation or Kafkaesque Metamorphosis. Russia's Democratic Foreign Policy and Its Priorities,"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August 27, 1992, p. 25.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신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는 지역 안정화와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는 상기와 같은 ‘신외교정책’ 목표와 동북아정책 기조의 틀내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우선의 대남북한 경제관계 활성화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어 정치·군사상황이 불안정한 동북아지역, 특히 한반도를 자국안보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간주하고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유지를 러시아의 이해에 직결시키고 있다.³¹⁾ 러시아연방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한국의 차관 및 산업과 농업분야 개발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국을 무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한국과의 정치 및 경제관계 발전을 통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견제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다변화와 첨단기술 도입 및 러시아연방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과의 경험관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관계는 현재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

31) Georgy F. Kunadze, “러시아 외교정책 기조와 한반도정책” (쿠나제 러시아 외무 차관 초청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1992. 10. 25), p. 2.

의 개혁과 개방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종전 수준의 경제협력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1961년 소·북간 체결되고 1991년에 5년 더 연장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기초로 북한과의 기존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및 무역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³²⁾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서의 핵확산방지를 지역안보와 연결시키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또 다른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 한국우선의 대남북한 경제관계 활성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3가지의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내적 요인은 국내개혁, 대외적 요인은 세계적 차원에서 대미관계와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이다.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 추진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2) Gennady Chufrin, "Russian Policy towards the DPRK: Goals and Uncertaintie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ur Major Powers' Policies toward the DPRK, Sep. 30, 1992 (Seoul: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pp. 13 & 19와 본 논문의 p. 50 참조.

2. 對韓半島政策 決定要因

가. 國內改革

(1) 政治改革의 現況과 問題點

러시아연방은 현재 보·혁간 갈등심화로 정치상황이 불안정하며, 「독립국가연합」의 와해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소련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1991년 6월에 집권한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동년 12월 21일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되기 이전에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과 점진적인 개혁속도에 반대하고 러시아공화국을 서구모델에 의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시키고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시키기 위해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1991년 11월 1일 포고령 선포권, 자유로운 각료임명권 등 비상대권을 러시아공화국 인민대표대회로부터 인정받은 옐친 대통령은 이와같은 개발독재형 권력을 기초로 1991년 11월 6일 러시아공산당 완전해체령을 내리고 러시아공화국의 정부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공포하고 1년간의 비상친정 체제를 구축하였다.³³⁾

소연방의 붕괴로 기득권을 상실한 구소련 공산당원, 공산주의 추종 관료인 노멘클라투라, 일부 군부세력 및 의회내 보수파들은 경제난 악화 등 개혁부작용으로 옐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약화되자 러시아의 서방화와 시장경제 도입 및 대

33) *Daily Report: Soviet Union*, November 7, 1991, pp. 49~51.

통령 권한강화에 반대하고 새로운 경제프로그램 등을 주장하여 엘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위협하였다. 소연방 붕괴 이후 최초로 개최된 러시아연방 제6차 인민대표대회(1992. 4. 6~21)에서는 소연방의 해체 승인, 러시아연방의 구소련 계승, 헌법개정 및 정부와 의회의 권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권력투쟁이 노출되었다. 개혁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240억달러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서방측의 경고로 인민대표대회는 엘친 대통령의 급진경제개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보수파가 제시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불인정, 대통령의 각료임명시 의회의 승인필요, 대통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최고회의의 거부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잠정승인 되었다.

보수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엘친 대통령이 반대세력의 공세를 예상하여 1992년 12월 1일 개최될 예정인 인민대표대회를 1993년 3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고, 인민대표대회에서 엘친정부의 개혁정책을 수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10월 24일 「구국전선」 창립대회를 갖고 반정부 공동전선을 펴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위하여 「대통령조각권」을 부결시키고 정부를 전적으로 의회의 통제하에 두는 「정부통제법」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엘친정부는 의회경비대 해산령을 선포하고 「구국전선」을 불법화하는 한편, 최고회의의 해산이나 대의원의 전원교체, 1992년 12월 1일에 만료되는 비상대권을 연장하기

위한 비상사태령 선포 등을 검토함으로써 러시아연방의 政情은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었다. 옐친 대통령은 급진개혁정책이 상기와 같은 정치불안정을 야기하자 현재 러시아연방의 정세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보수파와 타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수파들이 1992년 12월 제7차 인민대표대회에서 개혁프로그램의 중심인물인 가이다르 총리서리의 인준을 거부함에 따라 옐친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인민대표대회를 해산시켰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보수파들은 인민대표대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 등 국가통치기구의 권한박탈을 기도하는 모든 국민투표를 금지하는 국민투표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혁간의 대립이 이와 같이 첨예화되자 옐친 대통령과 보수파 지도자 하스블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은 정국수습을 위한 막후협상을 벌인 결과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1993년 4월 11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정국수습안에 합의하였고, 의회는 이를 승인하였다.³⁴⁾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장래는 일단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지게 되었으나, 정치제도 개편 및 경제개혁안을 둘러싼 보·혁간의 권력투쟁 지속은 정국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經濟改革의 現況과 問題點

러시아연방의 현 경제상황은 급진개혁정책에 따른 부작용으

3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11, 1992, pp. 1 & 4; 「한국일보」, 1992. 12.

로 혼돈상태에 있다. 옐친 대통령은 당면경제목표를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경제안정, 생필품과 소비재 공급의 확대에 두고 급진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행정 가격에 의한 가격왜곡현상 시정, 생필품에 대한 국가보조로 인한 재정적자 축소, 공급증가를 통한 물자부족 해소 등을 위하여 1991년 10월 28일 가격자유화 및 사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진경제개혁안을 발표하고, 1992년 1월 2일부터 약 90%의 소비재와 80%의 공산물에 대한 가격자유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29일 국영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자율성과 인센티브의 결여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러시아공화국 민영화계획의 기본규정」을 발표하였으며, 1992년 2월 19일에는 기업세제 혜택 확대, 부가세율 인하, 군인봉급과 연금인상 등의 경제긴급조치를 취하고 1992년 말까지 총 14만개의 국영상점중 75%를 민영화하기로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농업사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제도 및 세제의 결함으로 대외무역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국내 생필품이 부족하여 러시아연방 경제는 혼돈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러시아연방의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맞게되자, 러시아연방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2년 10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의 주식보유, 수천개 공장과 기업체의 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제2단계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토지사유화를 최초로 명시한 신헌법초안이 현재

최고회의에 상정중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현 경제상황은 통화증발에 의한 악성인플레이션으로 거시경제적인 안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을 누려온 전공산당원들과 국영기업 경영자들이 사유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국가재정의 악화로 현재 약 7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소련의 외채상황을 다시 연기해 주도록 서방 선진 7개국(G7)에 요청할 방침으로 있다.³⁵⁾ 또한 차관대출 요건의 미비로 서방측의 경제협력이 미약하자 러시아연방은 현재 대외경제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외자도입법 등 경제관계법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10월 9일에는 제7차 「독립국가연합」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러시아를 비롯한 벨로루시, 카자흐, 우즈베크, 아르메니아, 타지크 6국은 루블권 중앙은행을 창설키로 합의하였으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독립국가연합」간의 협력방식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마르티노프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소장은 1992년 11월 방한시 러시아연방의 경제가 1993년까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³⁶⁾

엘친 대통령은 향후 개혁정책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연방내 보·혁간의 갈등은 심각해지고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 구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35) 러시아연방은 1992년에 상환해야 할 98억달러의 외채중 약 25% 정도만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6) 「동아일보」, 1992. 11. 4.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보·혁간의 갈등과 비교할 때 러시아연방 내 보·혁간의 갈등은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개혁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강세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또한 경제면에서 러시아연방의 산업체제가 현재 소비자나 국제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의 관건인 거시경제적인 안정확보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러시아연방은 2만 여개에 달하는 모든 국영기업을 1992년 내에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주식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파들의 반대로 국영기업의 사유화 계획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연방은 현재 70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로 큰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재정악화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현재 바터무역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연방과 「독립국가연합」 구성국들간의 경제협력도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협력방식이 정착되지 않는 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정국 불안과 경제난을 극복하고 개혁정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서방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대외적으로 정치·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美·러關係

미·러관계는 동반자관계 구축합의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내 경제침체와 러시아연방의 정세 불안정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경제원조를 자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서방, 특히 미국과의 군사협력 및 뱅쿠버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단일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1992년 1월 25일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이 더 이상 미국 도시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러시아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나타내는 선언을 하였다.³⁷⁾ 또한 옐친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은 1992년 2월 2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러 양국은 상호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밝혔다. 그 이후 러시아연방의 대미 정치관계는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러관계의 급진전은 6월 16~17일 옐친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간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하여 나타났다. 양국정상은 ‘새로운 동반과 화합의 시대’를 공식선언하고 냉전 이후시대에 공격용 전략무기감축과 핵확산방지 및 우주분야의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클린턴은 11월 4일 미대통령 당선 후 첫 공식연설에서 러시아연방과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의 완결을 천명한 바 있고, 옐친 대통령도 미국의 신정부와 추가적인 전략무기 감축협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의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강국인 미·러간에는 아직도 갈등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재정적자 보충을 목적으로 중국과 이

37) Sergei Blagovolin, "Russia changes its military Doctrine," *Moscow News*, no. 5, 1992 p. 2.

란 등에 첨단군사무기를 판매하고 핵기술 판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최근 재래식무기 감축에 따라 러시아 및 군사동맹국들의 이익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군을 중시하고 전략핵무기체제의 현대화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클린턴 신행정부는 군사 및 안보정책 면에서 기존의 공화당정책 기초를 유지하면서 군사비와 병력을 축소시키는 대신 기동성 위주의 군사력 구조개편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시킬 계획으로 있다. 결국 미·러 양국은 군사력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향력 유지를 위하여 군사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면에서 구소련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은 관료주의, 불안정한 법체계,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의 불확실성, 1억 9천만달러에 달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구소련의 부채 등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³⁸⁾ 따라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은 직접적인 재정과 기술지원 및 투자 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간접적 지원과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원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엘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투자보호를 위한 「이중과세방지 협정」과 「쌍무투자 협정」을 부시대통령과 체결하였다. 서방선진국(G7)은 1992년 4월 루블

38)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28, 1992.

화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적자 축소를 조건으로 러시아연방에 약속된 240억달러 중 130억달러를 IMF를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러시아연방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서방측의 러시아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연되었다.³⁹⁾ G7 뮌헨 정상회담은 7월 6~8일 러시아연방의 경제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IMF를 통해 240억달러의 지원금을 8월부터 3단계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러시아연방내 보수파의 공세로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엘친 대통령이 개혁노선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보수파와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클린턴 차기 대통령도 국내경제회복을 중시하고 있어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방제국의 러시아연방에 대한 경제지원은 정치·경제개혁과 연계되어 있어 러시아 국내정세의 안정유지와 개혁정책의 지속이 상호협력 강화의 관건이 되고 있는 바, 러시아연방은 대미 서방관계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다. 東北亞 情勢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는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점진적인 지역데탕트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군사·안보면에서 각국의 이해상충으로 유럽과는 달리 아직 냉전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과도기적인 불안정 국면에

39) *Time*, December 7, 1992, p. 43.

있다. 또한 동북아 4강국들은 이념과 군사력보다는 경제가 중시되고 있는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경제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992년 3월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의 한, 중, 일 방문과 11월 옐친 대통령의 한국방문 및 12월 중국방문 계획은 러시아연방이 국내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동북아 역내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통해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창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제적 역할증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방영토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과 북한의 핵개발⁴⁰⁾을 우려하고 있다.

소연방의 붕괴이후 동북아지역의 전략상 공백을 억제하고 지역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내 세력균형 유지와 동맹국들과의 관계공고화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과의 강력한 안보동맹관계 유지를 태평양전략의 중심으로 삼고 주일미군 주둔비를 포함한 더 많은 책임부담을 일본에게 요구하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참여지지 등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유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초강국인 일본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군비증강,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의사 표명,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통과, 플루토늄 반입 등을 통해 경제력에 부합되는 정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40)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에 관해서는 본논문 제Ⅳ장 제1절 참조.

러시아연방은 중국의 국방현대화를 통한 군비증강을 우려하면서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권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무기판매 등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으며, 러·중간의 동맹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일 양국은 현재 평화조약에 기초된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나 양국간 북방영토문제가 평화조약 체결과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측의 북방영토문제와 경협문제 연계(정경불가분의 원칙) 및 북방영토 반환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연방내 보수파의 거센 반발로 엘친 대통령의 방일이 연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근 평화조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일정책 포기, 일본의 대러 정경불가분원칙 포기유도, 군축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이익 견제, 대중 선린관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익우선의 「외교기본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⁴¹⁾ 이는 러시아연방이 탈냉전 이후 과도기에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견지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과의 경협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러시아연방은 향후 동북아지역에서의 자국안보를 위하여 다자간 안보구축 방안을 제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4강국들은 현재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41)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November 2, 1992, pp. 11~13.

적극적인 경제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과 첨단산업 주도에 의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미국은 대일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무역마찰 때문에 전통적 상호의존관계의 득실을 재고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국내 경제 회복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위하여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등 지역 포럼(forum)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요소를 대폭 수용하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시아에서 기득권을 견지하기 위하여 중국 및 남북한과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동북아 평화공세를 전개하여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 韓半島 情勢

동구사회주의권 및 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인 탈냉전 추세는 동북아질서 재편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개방압력이라는 대외 환경과 대내 경제난⁴²⁾에 직면하게 된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42)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1년 북한 GNP 추정치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영향으로 1990년도에 -3.7%, 1991년도에 -5.2% 성장을 하였다. 「한국일보」, 1992. 8. 13.

극복하고 체제유지를 위하여 1991년 가을, 한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동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대남정책에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은 1992년 9월 15~18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치, 군사, 교류협력에 관한 3개의 부속합의서를 일괄 타결하고 이의 실천기구인 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 4개 공동위원회를 11월부터 가동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이 「실천단계」로 진입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일세대의 권력승계와 체제유지를 강화하고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대미,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무조건 철수를 주장해 온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교섭을 조기에 타결지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통일과정에서의 단계적 철수와 통일 이후의 완전철수라는 신축적인 입장을 선전하고 있다.⁴³⁾ 또한 북한은 한국정부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금강산과 개성에 설치하자고 제의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1992년 10월 5일 외국인 투자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서 체제유지와 김정일 후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서 북한은 개방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43) 「조선일보」, 1992. 6. 28.

반면 한국은 동년 8월 24일 중국과의 수교⁴⁴⁾와 9월 28일 한·중정상회담을 통한 경제, 무역, 과학기술 분야의 협정체결을 계기로 중국과 정치·경제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은 11월 18~20일 엘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국교정상화를 발전시켜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은 이와 같은 북방정책의 성공을 기반으로 북한의 개방 및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경한 거부로 이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한 직접협상과 더불어 아·태지역안보협의체 구상제의⁴⁵⁾ 등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관계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지연시키고 있고,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재개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반도정세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속에서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대상 지역으로 부각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한간 및 한반도 주

44) 러시아연방은 한·중수교를 한·소국교정상화 이후 동북아지역에서의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이며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대외적 환경창출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였다. *Dairy Report: Central Eurasia*, August 26, 1992, p. 9.

45) 이상옥 외무장관의 1992년 7월 24일 필리핀에서의 「아세안」 연설과 노태우 대통령의 제47차 유엔총회 연설 참조.

변 강국들간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발언권이 행사될 수 있는 유엔의 역할과 동북아지역 집단안보기구의 창설을 강조하고 있다.⁴⁶⁾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이 한반도의 안정을 중시하면서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경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은 국내정국을 안정시키면서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미국과 서방의 경제지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 초점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있다. 그러나 북방 4도문제로 러·일 양국간의 관계개선이 단시일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가시화됨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러시아연방의 중요한 동북아 안보정책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간의 상호불신과 긴장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에서 급격한 정세변화를 바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현상유지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희망하고, 남북한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견제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46) 게오르기 아르바토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미·캐나다 연구소」 소장이 1992년 10월 26일 방한중 밝힌 견해이다. 「동아일보」, 1992. 10. 28 참조.

3. 러聯邦의 對南北韓關係

러시아연방은 현재 냉전체제의 산물로 성립된 남북한이 과거 40년 동안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남북한관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외교를 수행하고 있다.⁴⁷⁾

가. 對韓國關係 擴大

소연방의 붕괴 이후 한국은 구소련의 법적 계승국인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발전을 위해 대외환경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연방도 한국과의 우호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한국관계는 한국정부가 구소련에 제공했던 차관의 상환보증과 이자지불 지연문제로 경제협력면에서 일시적으로 교착상태를 보였으나 1992년 11월 18~20일 열친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기존의 국교정상화 단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1991년 12월 27일 러시아연방을 소련의 법적 계

47) 모스크바 라디오는 1992년 7월 6일 방송에서 "러시아는 남북한에 적극적이고 균형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July 8, 1992, p. 26.

승국으로 승인한 이후 정치면에서 양국간에는 선린우호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엘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간 현안문제 조정을 위하여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이 1992년 3월 서울을 방문하였고, 이상옥 외무장관이 6월 모스크바를 각각 방문하였다. 양국 외무장관들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한·러간의 우호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핵문제 등 국제문제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대화통로가 구축되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냉전이후시대 아·태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무부내에 아·태총국을 신설하고 주한대사에는 전 태평양·남동아시아 국장 파노프를 임명한 반면, 주북한대사에는 전 극동·인도네시아국 한국담당 부국장 파데예프를 임명하였다. 이는 러시아연방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한·러 양국간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져 양국의 군고위인사들이 상호방문 하였으며, 양국간 「영사협약」에 따라 10월 26일 블라디보스톡에 한국총영사관이 개설되었다. 러시아연방은 가까운 시일내에 부산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11월 18~20일에는 한·러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집권 이후 최초로 아시아국가를 방문한 엘친 대통령의 방한 배경은 한국의 대러 경협차관 재개와 투자확대 유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북방영토문제로 냉각된 대일관계 조정을 위한 「한국카드」의 이용, 러시아연방 국내정세 불안정에 대한 돌파구 마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은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이중과세 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경제공동위원회 구성규정, 「문화협정, 「1993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교류 합의서」 등 6개의 조약과 협정체결을 통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전문과 15조로 구성된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방문시 채택된 「한·소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선언)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한 것으로서, 전문에서 양국은 불행했던 과거의 잔재를 극복하기로 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시장경제원칙 등을 양국간 공동의 가치관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조약의 본문은 우호관계 발전, 양국간 무력위협 및 무력행사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명시하고 있다.⁴⁸⁾ 엘친 대통령은 1961년 소·북간 체결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1983년의 KAL기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블랙박스 본체와 기록테이프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엘친 대통령은 6·25 관련 자료의 1단계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적극적인 유화정책은 러시아연방이 한국의 경험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한국 접근을 대일 관계개선과 경험유치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엘친 대통령이 원유, 전자, 산림개발,

48)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원문은 부록 참조.

목재가공 등 23개 프로젝트를 한국에 제의하였다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및 소비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산업과 농업분야 개발경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등 러시아연방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러 양국은 무역협정과 오호츠크해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산업기술 이전, 현지 합작투자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경제협력 확대노력은 한국이 구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30억달러 차관(현금차관 10억달러, 소비재차관 15억달러, 플랜트 수출차관 5억달러)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이 약속한 현금차관은 전액 제공되었고 1991년도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4억 7천만달러는 이미 수출되었으나, 1991년도 소비재차관 잔여분 3억 3천만달러 수출은 소연방의 붕괴로 인한 지급보증주체의 불확실성으로 1991년 12월 27일 이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정부가 엘친 대통령의 방한 직전 구소련의 차관채무를 승계한다는 법률문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소비재차관의 미상환분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은행차관이자도 알루미늄으로 현물상환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장애가 되었던 차관문제가 일단 해결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엘친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전달한 KAL기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 테이프가 누락된 사실이 발

견됨으로써 현재 한국정부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관 및 경험재개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비행기록 장치 테이프문제가 양국간에 별문제 없이 해결되면 한국은 러시아측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 우주, 통신, 전자, 합금소재 등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사업과 시베리아 야쿠트 가스전 공동개발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공동개발 프로젝트(하바로프스크 지방과 마가단주의 자원탐사, 사할린주의 석유 및 가스화학 공장건설, 석탄채굴, 쿠릴열도의 유황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나. 對北韓關係 調整

러시아연방과 북한과의 정치관계는 한·소 국교정상화와 소연방의 붕괴 이후 급격히 냉각되어 현재 매우 불확실한 단계에 있다. 러시아연방의 극동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스크바 동방학연구소」의 겐나디 추프린 부소장의 견해에 의하면, 북한은 단기적으로 동구에서와 같은 근본적인 대내적 정치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⁹⁾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질서 재편과 대한국관계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북한관계를 이념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국익을 기초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하고 있다.⁵⁰⁾

49) G. Chuftrin, "Russian Policy towards the DPRK," p. 8.

50) 엘친 대통령은 1992년 11월 14일 한국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연방이 북한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의도가 없음을 밝혔다.

엘친 대통령의 특사 로가초프가 1992년 1월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 바 있으며, 러시아연방의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는 1991년 이래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군사대표단 교환, 함대와 전투비행단의 상호방문 등은 지속되고 있다. 동년 3월에는 「독립국가연합」 통합군과 북한군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긴급조치 계획문서가 조인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1992~93년에 양국간 군사협력, 무기거래, 러시아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군구와의 우호관계 확대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¹⁾ 또한 러시아연방은 소·북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정치, 경제, 문화협력에 관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양국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⁵²⁾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냉전종식, 한반도에서 남북대화의 진전,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북한과의 군사동맹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군사분쟁에 휘말려들 소지가 있는 제1조의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⁵³⁾ 엘친 대통령도 방한시 이 규정이 폐기되거나 크게 수정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러시아연방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견지하면서 러·북간의 군사동맹에 대한 한국과 미

51)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March 4, 1992, p. 18.

52) *Ibid.*, July 8, 1992, p. 26.

53) 「한국일보」, 1992. 11. 18.

국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경제협력관계는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소 무역은 북한 총 무역량의 1/2 이상 수준이었으나, 1991년 구소련측의 경화결제요구 이후 북한의 대러수출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 소련으로부터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매년 일정량의 원유를 우호가격으로 공급받았으나, 현재 북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원유공급이 대폭 감소된 결과 북한은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992년 4월 현재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합작투자는 7건, 269억 9천만루블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상호불신과 내부압력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대북 합작공장의 일부는 폐업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북한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2년 8월 북한과 남북한 관통 시베리아 가스관 부설에 합의한 바 있는 러시아연방은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섬에서 진행중인 자유경제지역 창설계획이 성공한다면 북한과의 경제와 무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고 북한이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블라디보스톡과 나훗카 항구가 제외되어 유럽과의 통과무역에서 이익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삼각'(포시에트-훈춘-나진) 개발계획 보다는 러시아의 자유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과 연계시킬 수 있

는 ‘대삼각’(블라디보스톡-연길-청진) 개발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독립국가연합」의 한인공동체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인자유경제지대의 창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⁵⁴⁾ 결국 러시아연방은 대북한관계에서 현재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공존 유지와 기존의 영향력 견지를 위하여 1961년 조약의 자동군사개입 규정을 냉전이후시대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54) G. Chufirin, “Russian Policy towards the DPRK,” pp. 14~18.

第IV章 統一問題에 대한 러시아聯邦의 立場

1. 核 및 軍縮에 대한 立場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서의 핵부재를 국익과 연결시키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군사대치의 해소와 무기감축 및 한반도 신뢰구축 문제에 유럽내 핵 및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경험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3기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과학용 핵시설은 1965년 소련의 원조로 건설되었으며 나머지 2기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그 이후 핵안정협정 조인과 핵사찰을 거부하였다. 미국 인공위성이 3년전 핵탄두 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북한의 핵시설을 발견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으로 야기되었다.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고 미국정부와의 협의하에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고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성명을 통해 한국내에 핵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12월 31일 남북한간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북한은 1992년 1월 31일 핵안전협정을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였다. 남북한간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정

책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현재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국제기구와 함께 확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1992년 3월 방한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협력하지 않을 것과 북한의 핵문제를 타국과 계속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를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⁵⁵⁾ 특히 옐친 대통령은 6월 17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에 남북한간에 채택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과 남북한 상호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한·러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현재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핵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⁵⁶⁾ 러시아연방 국방부기관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지는 1992년 7월 29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이 미, 한, 일과의 대화에서 「카드」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극히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⁵⁷⁾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에 핵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5) Maksim Yusin, "Moscow Promises to Support Seint in Nuclear Dispute with Pyongyang," *Izvestiya*, March 21, 1992, p. 3.

56)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January 9, 1992, p. 4.

57) 「한국일보」, 1992. 7. 30.

러시아연방은 현재 한반도에서의 군축과 군비통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첫번째 노력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남북한이 장차 군사훈련에 참관단 초청,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군사문제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조치들을 통해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간 군사대치의 해소와 무기감축 및 한반도 신뢰구축 문제에 유럽내 핵 및 재래식무기 감축 협상 경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⁵⁸⁾ 또한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의들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러, 미, 일, 중, 남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 안보체제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이 미국의 이해관계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양자간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통하여, 또한 경제·문화·학술면에서의 양자간 협력관계 확대를 통하여 다자간 안보체제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과학원 연구위원 M. 노소브 외 3인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동북아지역 안보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첫 조치로서 미·러간, 한·러간 등 쌍무적 또는 다자간 학술교류를 통해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

58)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CIS 군총사령부 제1참모차장),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북한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 p. 6.

다.⁵⁹⁾ 또한 오델리체프 「독립국가연합」 참모차장도 1992년 6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반도 군축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에서 아·태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검토·연구할 수 있는 교섭단체의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견지하면서 일본 및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연방은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견제 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이 동북아지역으로부터 미국을 축출하려 한다든가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을 이간시키려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⁶⁰⁾ 주한 및 주일미군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입장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군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던 구소련의 정책과 비교할 때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 南北間 交流·協力에 대한 立場

러시아연방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의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남북한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남북대화가 매우 부드럽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

59)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 (하),” 「국제문제」, 제 23권 제3호 (1992. 3), p. 114.

60) 위의 논문, pp. 113~14.

하고 있던 러시아연방은 남북간의 지속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지속된 상호불신이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서로 타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불신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⁶¹⁾ 러시아연방은 남북한간의 「남북합의서」 채택이 화해를 위한 첫 조치일뿐 쌍방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준비를 위하여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의 주요한 목적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 유지를 통해 한반도 안정화를 꾀함으로써 국내개혁에 장애가 될지도 모르는 대외적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남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3. 統一韓國에 대한 立場

전술한 바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거나 붕괴되리라고는 전망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남

61)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February 5, 1992, p. 38 & March 11, 1992, p. 2.

북한간에 상호불신과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반도통일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⁶²⁾ 러시아연방은 통일한국이 아·태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하더라도 러시아에 계속 우호적인 국가가 된다면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반도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⁶³⁾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방식에 대한 러시아연방내 의견들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의 미아시니코프는 한반도의 통일이 무력에 의한 베트남식 통일이나 독일식 흡수통일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⁶⁴⁾ 러시아연방의 일부에서는 독일식 흡수통일방식을 한반도통일의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다.⁶⁵⁾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는 어렵다고 보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 유지를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한국정부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⁶⁶⁾ 러시아연방은

62) Vladimir Miasnikov,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Seoul, Korea, p. 18.

63) Vadim P. Tkachenk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pp. 7 & 11 참조.

64) V. Miasnikov,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p. 18.

65) 「조선일보」, 1991. 12. 29.

66) G.F. Kunadze, "러시아 외교정책 기조와 한반도정책," p. 2.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이 실현될 때까지는 남북한의 자주적인 행동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반도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가하여 통일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다국간 협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⁶⁷⁾ 따라서 한반도통일 문제가 국제화되는 추세를 보이면 남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다국간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7) 이는 로가초프 옐친 대통령특사가 1992년 3월 13일 방일중 밝힌 내용임.

第V章 舊蘇聯과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評價: 變化와 持續

1945년부터 현재까지 상기와 같은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의 대한반도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변화된 측면은 한반도 공산화정책, 한국에 대한 인식, 대남북한 경제관계,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이며, 지속되고 있는 측면은 한반도의 안정모색과 북한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 變化側面

가. 韓半島 共產化政策 拋棄

구소련의 한반도 공산화정책은 완전히 포기되었다. 소련은 국제체제가 변화되고 유러공산주의(Eurocommunism)와 민족공산주의의 전개로 사회주의권에서의 정치적 지도력을 점차 상실하게 되자 세계정치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세계공산화정책보다는 군사력에 기반을 둔 자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세계혁명을 위한 소련의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그 동기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면서 고르바초프 시대 말기에 완전히 포기되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볼세비키들은 1917년 10월혁명을 전후하여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지 ‘민족해방’ 문제를 ‘프롤레타리

아혁명' 문제의 일부로 간주한 레닌의 이론에 따라 한반도에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한국독립을 지지한 바 있으며, 특히 세계공산주의운동을 주도하였던 「코민테른」(Comintern : 1919~1943)을 통해 한국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공산화에 큰 이해를 갖고 있던 「코민테른」이 1928년 조선공산당의 붕괴이후 한국내 민족공산주의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제 말기에는 한반도에서 공산혁명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은 김일성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선발하여 북한지역에 혁명을 수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은 1945~53년 시기에 통일전선전술과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1950년대 후반기에는 미국의 대소봉쇄정책과 「대량보복」 군사전략에 직면하여 선전적 차원에서만 '통일민주전선'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초 동서진영간의 데탕트 이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서는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대외정책상의 실질적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바,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동서진영간의 긴장완화와 소련의 「신사고」 외교,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중·소분쟁과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노력 등이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연방 붕괴 이전에 이미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한 바 있는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어 한반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 韓國에 대한 認識의 變化

제2차세계대전 종료 이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소련의 대한 국 인식은 극동에서 ‘미제국주의의 전초기지,’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군사기지,’ ‘소련에 대항하는 펜타곤의 戰車’ 등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었으며, 소련은 한국을 진정한 독립 국가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경제가 급성장하고 한국의 대미, 대일, 대EC 경제관계가 증대되어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신흥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자 소련은 한국의 잠재력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소련은 한국과의 경협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한국에 접근하고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88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여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실제로 체험한 소련은 기존의 대한국정책을 재평가하고 한국으로부터 경협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경제가 중시되고 있는 냉전이후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제반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韓國優先의 對南北韓 經濟外交

1945년 이후 한국전쟁 발발시까지 소련의 대북한 경제관계는 소련의 전후 복구문제로 미미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과 중·북한간의 관계 긴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의 휴전이후 북한의 전후재건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소련은 중·소분쟁시에는 북한의 대중편향 방지를 위하여, 신냉전시기와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미·일·중 및 한·미·일 3각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대북관계 강화수단으로 북한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증진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양국간 경제 무역관계는 소련과 북한의 경제난과 소련의 경화결재 요구로 악화되었으며 1990년도에 23억 5천만달러에 달했던 양국간 무역이 1991년도에 40%나 감소하여 14억 2천만달러로 축소되었다. 반면 한·소간의 무역관계는 1970년대 중반에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의 형태로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직교역을 함으로써 급진전되었고, 이 결과 1988년도에 2억 9천만달러에 불과했던 한·소간의 무역은 1990년도에 8억 9천만달러에 이르렀으며 1991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5% 증가하여 12억달러로 급증하였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경제관계는 하향추세에 있는 반면, 대한민국 경제관계는 열린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향후 한국에 편향된 대남북한 경제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라. 南北韓의 統一政策에 대한 支持立場 變化

소련은 동서진영간의 데탕트 시기에 북한의 호전적인 통일정책을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1945년부터 「88 서울올림픽」 참가시 까지 연방제 통일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 북한의 통일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였고 「2개의 한국승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동서진영간의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88 서울올림픽」 참가와 한·소수교를 계기로 하여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원하고 한국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한이 참여하는 다국간 협상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장애요인이라는 소련의 종전입장은 변화되었다. 소련의 붕괴이후 동북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연방은 북한에 의한 돌발사태를 방지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미군병력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2. 持續側面

가. 韓半島의 安定摸索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러시아인들은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전략적 이해가 상호교차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역내 세력균형이 불안정하거나 변화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안정을 모색해 왔다. 제정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 직전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39도선에서의 한반도 영향권 분할을 일본에 제안한 바 있으며,⁶⁸⁾ 스탈린은 제2차세계

대전 종료시 戰後日本 점령에 대한 참여의도와 미국과의 대립을 우려하여 트루만 미국대통령의 한반도 38도선 분할제에 반대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후임자들은 소련외교의 유럽중심주의와 중·소분쟁, 미·일의 대중접근 등 자국에 불리한 동북아정세 변화 때문에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고르바초프는 적극적인 대한반도 등거리외교를 추진하였다. 급진적인 국내 개혁정책을 수행중인 러시아연방도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 유지를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구소련의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계승하고 남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北韓의 軍事戰略的 重要性 堅持

구소련은 북한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러시아연방도 군사면에서의 대북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소련은 1945년부터 1991년 말 소연방이 붕괴될 때까지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북한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소련은 1945년 8월 대일전 참전시 일본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개석 정부와 「우호동맹조약」을

68) Wladimir Burtzew, *Der Zar und auswärtige Politik: Das geheime Memorandum des Grafen Lamsdorff/Das geheime Orangebuch* (Berlin, 1910), p. 90.

체결하는 한편, 북한지역을 점령하고 친소정권을 수립하였다. 또한 소련은 냉전시기에는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소분쟁시기에는 중국견제와 북한의 대중편향 방지 및 대북한 영향력 견지를 목적으로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군사·경제원조를 하였으며, 신냉전시기 및 고르바초프시대 전기에는 아·태지역으로의 군사적 행동반경 확대를 위하여 북한을 군사전략적 교두보로 이용하였다.

소련은 냉전이후시대를 맞이하여 대미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대중관계가 정상화되자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1991년부터 중단하였으나 정치·군사상황이 불안정한 동북아지역을 자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간주하고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을 계속 유지시켰다. 현재 러시아연방은 대북한관계의 단절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안보전략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고,⁶⁹⁾ 1961년 소·북한간 체결된 조약을 폐기하기 보다는 수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69) *Daily Report: Soviet Union*, December 24, 1991, pp. 6~7.

第Ⅵ章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1. 러聯邦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1990년대에 러시아연방의 국내정세는 체제개혁에 따른 정치 불안정과 경제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동북아질서는 역내국가간 상호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러관계가 적대관계와 경쟁관계로부터 동반자관계와 우방관계로 전환되었으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세계정치를 주도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는 평화공존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나 상호불신과 대결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대내적으로는 체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정치를 안정시켜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 미·중·일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자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다음과 같은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政治·軍事分野

첫째, 국내정국 불안정과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내체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변환경을 창출한다는 대외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통일 등 한반도정세 변화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관계에 의한 한반도의 안정을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반도분단의 현상유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주도의 한반도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⁷⁰⁾

둘째, 러시아연방은 단기적으로는 엘친 대통령의 방한시 체결된 「1993년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교류합의서」를 기초로 북한과의 동등한 수준에서 한국과 군사협력을 모색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군축과 군비통제를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반도통일을 적극 지지하면서⁷¹⁾ 한국과의 군사관계를 잠재적 동맹국의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안정화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70) Kim Yu-Nam, "South Korean-Soviet Cooperation: New Structures for Peace and Stability," in Kim Y. N. (ed.), *Soviet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e 1990s* (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1992), pp. 4~6 참조.

71)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최근 마련된 「외교기본구상」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러시아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1992. 12. 3.

셋째, 냉전이후시대의 국가간 관계에서 군사면보다는 경제면이 더 중시되고는 있으나 동북아지역은 강대국간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어 정치·군사상황이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계속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1961년에 소련과 북한간에 체결된 조약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 제1조 규정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대북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군인사교류와 전투비행단 및 함대의 상호방문 등 양국간 군사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결국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통일시까지 남북한에 대하여 과거보다 더욱 균형된 등거리외교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經濟分野

첫째, 경제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대한국관계는 구소차관 및 이자상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열린 대통령 방한시 체결된 「한·러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기타 경제·무역에 관한 협정들을 기초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연방과 군수산업의 민영화 및 야쿠트 가스전 개발 등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 있으며, 러시아연방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선진국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한국을 동북아지역에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협력 및 투자가 만족할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및 소비재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한국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연방과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현재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은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나 북한의 개혁·개방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양국간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경제분야에서 한국에 편향된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다. 南北韓問題 關聯分野

첫째, 러시아연방은 북한의 핵개발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한국 및 국제기구와 계속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현재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 유지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안정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대한 자국 영향력 극대화를 위하여 「2+4」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러시아연방은 이미 사회주의체제를 청산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도의 한반도통일이 가시화되더라도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통일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문제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

고, 나아가서 미군의 한국주둔을 계속 용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 韓國의 對러聯邦 外交政策 推進方向

한국정부가 한반도 주변의 4강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안보기반이 확고히 되었으며 우리에게 유리한 통일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한국주도의 한반도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통일한국에 의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의 급속한 변화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관계에 의한 한반도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전략적인 고려로부터 북한과의 정상관계 회복 및 유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군사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러시아연방과의 경쟁관계에서 러시아연방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세불안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환경 및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 러시아연방이 현재 서방선진국들에 외채상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하부구조가 미비하다는 점, 한국의 경제실익, 러시아연방이 현재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통상차원에서 타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남북한간의 현안문제인 남북한 상호핵사찰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며, 한반도통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긍정적인 기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

면서 다음과 같은 대러시아연방 외교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 政治·軍事分野

첫째, 한국정부는 한·러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면서 냉전시대와 같은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지지 가능성을 견제하고 러시아연방이 남북한간에 현실적이고 균형된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는 한국의 안보문제와 대러시아연방 경협문제를 연계시켜 북한에 대한 첨단군사무기 및 무기제조 기술의 판매자제와 핵개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의 밀반출 방지를 러시아연방정부에 계속 요청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연방의 군사협력문제는 한국의 대미·일 관계에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정세 변화를 고려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반도통일이 한·미·일 협조체제를 기초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연방과의 군사적 동맹관계 수립을 피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소련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에 있어서 군사블럭의 해체와 외국군사기지의 폐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현재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일본 및 중국의 군사대국화 견제를 위하여 주한 및 주일미군의 완전철수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4강국과 수교하고 있는 한국은 안보가 위협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북아지역 및 한반

도의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유의하면서 러시아연방이 제안하고 있는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에 관심을 보일 필요는 있다.

나. 經濟分野

첫째, 한국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러시아연방의 경제개혁과 정치안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인 바, 이는 러시아연방 개혁의 성공여부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은 러시아연방이 구소차관에 대한 이자지불을 재차 지연시키는 경우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자본보다는 산업과 농업기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대외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하되 정확한 사전조사를 한후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연해주 지역은 사회기간시설이 미비하고 노동력 확보가 어려우며 나훗카 자유경제지역 설치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교환할 수 있는 「러시아 경제정보센타」 등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기업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러시아연방의 풍부한 자원과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에 참여하고 투자하되 미·일과의 다자간 공동참여 방식이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 南北韓問題 關聯分野

첫째, 한국정부는 현재 남북한 관계개선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연방과 함께 유엔 및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등 공동보조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이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연방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유엔안보이사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러 경협관계를 러시아연방의 대북 핵압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연방의 대북한 영향력이 한·소수교 이후 많이 약화되었으나 최근 러시아연방측의 대북한 태도를 고려해 볼 때 러·북한간의 관계가 현재보다 더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러시아연방을 통하여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북한이 현재 교착상태를 보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남북대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도록 북한을 설득해 줄 것을 러시아연방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통일 문제가 국제적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러시아연방은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러시아연방과의 전반적인 관계
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金達中 編。「蘇聯の亞細亞政策と韓半島」,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研究論叢 第6集 (1987).
- Burtzew, Wladimir. *Der Zar und die auswärtige Politik: Das geheime Memorandum des Grafen Lamsdorff/Das geheime Orangebuch* (Berlin, 1910).
- Gromyko, A.A. and Ponomarev, B.N. *Soviet Foreign Policy 1917~1980* in two volumes, vol. II 1945~1980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 Günter, Bernhard, et al. *Der Sieg der Perestroika* (Bergisch Gladbach: Gustav Lübbe Verlag, 1991).
- Institut Vostokovedeniya Akademii Nauk SSSR. *Otnosheniya Sovetskogo Soyuza s narodnoy Koreey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Izdatelstvo Nauka, 1981).
- Kim, G.F. and Shabshina, F.I.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Revolutions in the East* (Moscow, 1972).
- Kim, Yu-Nam (ed.). *Soviet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the 1990s* (Seoul: Dankook University Press, 1992).
-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APN-Verlag, 1986).

Sowjetunion 1974/75: Innenpolitik Wirtschaft Aussenpolitik Analyse und Bilanz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75).

Sowjetunion Heute, nr. 10 (Okt. 198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6, vol. VIII (Washington D.C.).

Wassmund, Hans. *Grundzuege der Weltpolitik: Daten und Tendenzen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Verlag C. H.Beck, 1985).

2. 論 文

金學俊. “韓國休戰 이후 現在까지의 大韓民國의 北方政策.” 「韓國北方關係의 政治外交史的 再照明」, 韓國政治外交史學會論叢 第6輯 (1989).

노소브, M.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 (하).” 「국제 문제」, 제23권 제3호 (1992. 3).

오멜리체프, 브로니슬라브 (CIS 군총사령부 제1참모차장).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북한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

쿠나제, 게오르기. “러시아 외교정책 기조와 한반도정책.” 외교안보연구원 초청 세미나 (1992. 10. 25).

Chufrin, Gennady. “Russian Policy towards the DPRK: Goals

and Uncertainties."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ur Major Powers' Policies toward the DPRK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ptember 30 1992).

Clough, Ralph N.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in Zagoria, Donald S.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Dmytryshyn, Basil. "Soviet Perceptions of South Korea." in Park, Jae Kyu and Ha, Joseph M. (eds.).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Seoul: The Institute fo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3).

Gelman, Harry. "Soviet Policy toward China." in Laird, Robbin F. and Hoffmann, Erik P. (eds.). *Soviet Foreign Policy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mpany, 1986).

Jahan, Egbert. "Sowjetische Weltpolitik." in Knapp, Manfred and Krell, Gert (eds.). *Einfuehrung in die Internationale Politik*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1990).

Kramer, Mark. "Soviet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urrent History* (October 1991).

Menon, Rajan. "Gorbachev's Japan Policy." *Survival*, vol. XXXIII, no. 2 (March/April 1991).

Miasnikov, Vladimir. "Russia in the New Concert of East Asian

Powers.” A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New Asian–Pacific Era and Korea”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ugust 20~21, 1992, Seoul, Korea.

Tkachenko, Vadim P.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Korea and the Russian Position.” A paper prepared for the Fifth ISSS–IFES Joint Conference, Seoul, Hotel President, October 13~14, 1992.

Zagoria, Donald S. “The Kremlin Looks Bad in 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II, no. 1 (Spring/Summer 1983).

3. 其 他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Daily Report: Soviet Un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Izvestiya.

Moscow News (weekly).

빈 면

附 録

빈 면

附錄 1

Korea—Russia Basic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Desirous of strengthening the bonds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of promoting close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ir peoples,

Conscious of the traditional relations between their two peoples and determined to overcome the consequences of the adverse period of their common history,

Convinced that futur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guided by the common values of freedom, democracy,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market economics,

Affirming their conviction that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ir peoples will contribute not only to their mutual benefit but also to the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and throughout the world,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zing that the Moscow Declaration of 14 December 1990 shall continue to gover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develop friendly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equality, respect for territorial integrity and political independence, nonintervention in internal affairs and other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rticle 2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refrain in their mutu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nd shall settle all their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Stat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us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U.N. mechanisms to settl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shall cooperate and endeavor to enhanc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maintenance of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3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develop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cluding exchanges of in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rticle 4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 regular basis between their heads of state, foreign ministers and other members of their governments, or their representatives to discuss matters concerning bilateral rel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and regional issues of mutual interest.

2. The consultations shall normally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lternately.

Article 5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broad contacts and ties between their nationals and social organization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support contacts and exchanges between the parliaments of the two countries.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direct contacts between their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ticle 6

1. The national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ntry and sojourn of aliens, be permitted to enter or leave, to travel or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nationals and juridical person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7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and develop extens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conomic, industrial, trade and other fields to their mutual benefit and on the basis of principles generally recognized in international practice.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and develop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inter alia,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energy, mining, communication, transport and construction.

3.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also promote and develop, on the basis of their mutual interes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the rational use of natural resources.

Article 8

1.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ing tha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ll be of great value in advancing the well – being of their peoples, shall develop broad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peaceful purposes.

2.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pecial attention shall be devoted to promoting exchanges of scientists and the result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nd encouraging joint research projects.

Article 9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courage and facilitate diverse and close contac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 communities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10

1. In recognition of their respective centuries-old cultural heritages,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he arts, culture and education.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he mass media, tourism and sports, and encourage the exchange of young people.

3. The contracting parties consider it a matter of special interest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each other's languages and cultures in the two countrie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courage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cultur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ll persons concerned with broad access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within its territory, recognize the rights of its nationals or citizens originating from Korea or Russia to enjoy thei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ce their own religion, and to use their own language.

Article 12

The contracting parties, deeply concerned about the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crime, shall promote effective cooperation in their efforts to combat organized crime, international terrorism, illegal traffic in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llegal acts aimed against the security of maritime navigation and civil aviation, counter-feiting, smuggling, including illicit transboundary traffic in articles of national, artistic, historical or archeological value as well as in animal or plant species under threat of extinction, or parts or derivatives thereof.

Article 13

This treaty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sum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under any international treaties and agreements currently in force and shall not be invoked against

any third state.

Article 1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treaties and agreements, wherever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rticle 15

1.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30 days after the day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2.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for 10 years and shall continue to be in force thereafter until terminated as provided herein.

3.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by giving one year'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erminate this treaty at the end of the initial 10-year period or at any time thereafter.

附錄 2

韓·러시아 基本條約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은 양국간의 평화와 우호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양국국민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 및 문화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양국국민간의 전통적인 관계에 유념하고, 아울러 역사상 양국간 불행했던 시기의 잔재를 극복할 것을 다짐하며, 양국간의 미래관계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존중 및 시장경제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양국 및 양국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상호이익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안보와 번영에도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재천명하고, 1990년 12월 14일의 모스크바선언이 계속 양국관계의 지침이 될 것임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은 주권·평등·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의 제원칙과 기타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제 2조 1. 계약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양국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양국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 계약당사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국제연합을 최대

한 활용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협조·노력한다.

제3조 1. 체약당사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체약당사국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체제안에서 정보교환을 포함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 1. 체약당사국은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과 양국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 외무장관 정부각료 또는 대표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진다.

2. 이러한 협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제5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 및 사회단체간의 광범위한 접촉과 유대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회간의 접촉과 교류를 지원한다.

3. 체약당사국은 양국지방정부간의 직접적 접촉을 장려한다.

제6조 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 여행 또는 체류를 할 수 있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제7조 1. 체약당사국은 국제관행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원칙에 따라서 경제·공업·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양국간의 광범위한 호혜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특히 농업·임업·어업·에너지·광업·통신·운송·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

3.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호 이익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과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발전시킨다.

제8조 1.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협력이 양국국민의 복지증진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발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과학자의 교류와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연구사업을 장려하는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실업계간의 다양하고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장려하고 원활하게 한다.

제10조 1. 체약당사국은 수세기에 걸친 양국의 문화유산을 인정하고, 예술·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킨다.

2. 체약당사국은 대중매체·관광·체육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청소년의 교류를 장려한다.

3. 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모든 관련인사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언어와 문화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교육기관의 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11조 각 계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 및 시민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며 또한 그들의 고유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12조 계약당사국은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에 깊이 우려하고, 조직범죄·국제테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해상항해 및 민간항공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행위·화폐위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또는 그 일부분 또는 그 파생물과 민족적·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품의 불법반출을 포함한 밀수 등을 진압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이 조약은 현재 발효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른 어느 일방 계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3국에 대항하여 원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제15조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 교환일로 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3. 일방 계약당사국은 타방 계약당사국에 대하여 1년 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를 함으로써 당초 1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그 후 어느 때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서울에서 1992년 11월 19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研究報告書 (92-1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編輯委員會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TEL 266-0892

印刷日 1992년 12월

發行日 1992년 12월
